

IT 정치적 사안이다?

IT 기본법의 취지는 '미래 경제를 책임질 IT 산업을 키워나가자면 종합적인 지원체계, 범정부적인 성장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는 업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IT 산업을 한국의 성장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종합관리·지원 체계 필요성이 근본 취지

정보통신부가 밝히고 있는 IT 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정보통신부는 IT 분야가 연평균 23.4%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해 142조원의 생산을 기록했고, GDP 성장기여율 50.5%, 수출 512억 달러(무역흑자 157억 달러)를 이룰 정도로 활성화되면서 '98년 102만명이던 IT 분야 종사자가 2000년에는 126만명으로 급증했다는 수치를 바탕으로 IT 산업이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고용 안정에도 큰 몫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약 1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 역시 IT 산업이라고 한다. 상반기에 전통 산업의 수출은 줄지가 않았는데도 IT 산업의 수출은 16.7%가 줄었다는 것이다. 또, 이동전화, ADSL 같은 주력 상품의 부품 국산화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2005년까지 약 14만명의 IT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등 IT 산업이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진단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IT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IT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며, 기존 산업의 육성책과는 다른 종합적인 지원 체계와, 범정부적인 성장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얘기다. 또, 국민경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이를 관장할 성장관리 체계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인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관리 체계가 완비되어 있는데도, 이보다 높은 12.9%의 비중을 차지하는 IT 산업은 법이나 정책추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정보통신부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IT 기본법이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산업발전기본법'이 정식 이름인 이 법의 등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법의 내용이나 법 해석과 같은 근본 문제를 떠나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현 | 컴퓨터월드 기자

IT 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 필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우선 'IT 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T 산업을 정보통신 서비스업과 제조업(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IT 제품의 수요처이며, IT 제품의 경쟁력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이 두 요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IT 산업을 육성하려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산업발전법 등 제조업 중심의 기존 법률을 IT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얘기다.

정보통신부는 IT 산업을 '시스템 산업'으로 보고 있다. 전통 산업이 대기업의 조립과



인과 마케팅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IT 산업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설명. 또, 업종간 융합현상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콘텐츠, ASP같은 새로운 업종이 계속 창출되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이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판단이다. 이런 판단은 업종별 구분방식에 따른 기존 법률로는 IT 산업 육성시책을 효과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보통신부 주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IT 산업 균형발전 위한 종합지원체계 필요

정보통신부가 주장하는 두번째 필요성은 정보화, IT 산업, 통신서비스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IT 산업의 삼각축이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입장. IT 산업의 수요를 만드는 정보화는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고, 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제정으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IT 산업은 양적인 성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정책추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얘기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에 IT 산업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IT 산업 육성에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보통신부가 꾸준히 주장하는 점이다. 이전 시대의 산업화 정책이 분리주의에 입각해 기술, 인력, 창업, 입지, 조세와 같이 투입되는 요소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나 IT 산업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버리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부는 'IT 산업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IT 산업 발전전략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할 Think Tank가 요구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빨리 범정부 차원의 성장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97년 9,683개였던 IT 기업이 지난해 16,774개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동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12.9%로 커질 만큼 높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IT 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려면 기술, 인력, 금융, 수출 등을 관장하는 여러 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IT 산업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면서 앞으로 대부분의 부처가 IT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예상되지만 IT 산업은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전통산업을 관장하는 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보통신부가 지적하는 점이다.

법·체계 중복 문제 제기돼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쪽의 얘기는 좀 다르다. '정보통신 분야는 이미 국민의 삶에서 기본이 되었고 따라서 어느 한 부처에서 관장하고 나설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IT 정책과 업무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곳으로는 산업자원부를 들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정보기술산업발전기본법'의 가장 큰 기조는 정보통신 분야의 조정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는 이미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하는 일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기구를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다른 부서가 굳이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들고 나

온다고 해도 할 말이 있

다는 입장이다. 정보

통신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법은 규제법과

진흥법으로 나

눌 수 있다. 규

제법은 서로 영

역을 침범할 수 없

게 하고 있지만 진흥

법은 다르다. 과학기술

처에는 '과학기술기반법'이 있

고, 산업자원부도 '산업기술개발기반조성

에관한법'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산업자

원부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특별법'도

만들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각 법

나름의 입법 취지와 적용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또,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

도 이 법들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흥법이기 때문이다."

특정분야 '우대나 아니냐' 논란

산업자원부에서는 IT 분야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 법률들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특정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입장에서 개념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다. 정보통신부는 'IT 분야가 국가 기반산업이므로 체계적

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산업자원부는 'IT 분야 역시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다른 산업 분야도 관련 지원법이 있는 데다가, IT 분야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역시 지원체계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IT 분야를 지원하는 특수한 목적의 법을 만들 경우 WTO에서도 특정 기술 지원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IT기본법은 기술개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표준·해외진출 등 IT 관련 전 부문을 포괄한 법"이라는 설명으로 맞섰다.



"이 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정부 조직 내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서는 사람이 생길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의 '차 문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부 안에서도 부서간에 힘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 후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IT기본법이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IT기본법의 상정이 IT 산업의 발전에 귀중한 토대가 될 수도, 아니면 부처간 힘겨루기로 더욱 큰 혼란을 가져와 위기의 IT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힘겨루기 본격화될 수도

WTO가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 역시 주의를 기울여 각 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법'이라는 IT기본법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 있다고 한다. 기술 개발에 대해 각 부처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은 미국의 IT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작년에도 IT 분야 교육과 관련한 'IT 법'을 만들었다고.

정보통신부의 한 실무 담당자는 "미국같은 정보통신 강국도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려고 법을 만드는 판인데, 이런 노력없이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고 얘기했다. IT 산업은 어떤 특정 산업이 아니며, 굳이 개념을 만들자면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사업들'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이견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이런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IT기본법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상정을 계기로 부처간의 힘겨루기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이 법을 부처간 협의사항으로 내용을 경우 "부처의 입지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 한사람은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과 정보인프라 확산을 임무로 만들어졌다. 물론 정보인프라 확산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운영부부는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으며, 인프라 확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정보문화 확산은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규제

부분도 통신위원회에 맡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심판을 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독립된 규제기관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인데 정통부에서 IT기본법 얘기를 들먹이면 정통부 존폐 문제를 여기저기서 들고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런 역할을 떠나서도 IT 분야는 각 부처별로 다 추진해야 될 분야이지 어느 부서에서 틀어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행정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다 관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 IT 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법의 필요성 방향 같은 근본 취지를 놓고는 별다른 논쟁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각 부처 사이의 땅따먹기 논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다.

IT 기본법은 95%가 정치적인 내용?

전문가들은 IT 기본법이 겉으로는 아주 새로운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IT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보다는 조직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정보통신부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을 염려해서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상이다.

다른 모 부처의 관계자는 이 관계자 역시 취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IT 기본법은 결국 ‘정치적인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법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의 95%가 정치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안이 상정되면 목숨을 걸고 이를 막으려는 부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정부 조직 내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서는 사람이 생길 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의 ‘차문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부 안에서도 부서간에 힘의 이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 후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IT 기본법이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조직 개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조직이 개편된다면 이 법의 책임이나 권한도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이 개편된 뒤에 법안 문제를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으 IT 산업의 위기다. 2~3년을 그냥 기다리기에 상황은 너무 안 좋다. IT 기본법을 밥그릇 싸움의 측면에서만 보는 시각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 제정여부를 넘어서는 사안

현재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정통부가 이 법을 부처간 협의 사항으로 올리면 산자부는 정통부의 역할 문제를 들고 따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8년 아더엔더슨에 컨설팅 의뢰를 한 결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정보통신부는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달리 해석하면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가 IT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을 결국 IT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가 최근 에너지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반박한다. 산업자원부가 경제 산업을 케도에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각 산업들이 제 케도에 오르면서 정부 부처가 그 안에서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정보통신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민간과 정부를 망라하는 추진체계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고 묻는다. IT 산업에 관계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지만 “IT 기본법의 추진은 이러한 입장이 바뀌었음을 뜻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얘기다. 모두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사실 IT 산업의 파이가 갑자기 커진 것이 IT 기본법을 두고 부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각 부처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다른 부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이유인지도 모른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정보통신부가 자기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듣는 상황이 된 것은 어쩌면 정보통신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법안은 다 만들어진 상태이며, 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협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당초 목표했던 대로 9월에 국회에 올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10월 정도면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보통신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현재의 상황은 IT 기본법의 상정이 IT 산업의 발전에 귀중한 토대가 될 수도, 아니면 부처간 힘겨루기로 더욱 큰 혼란을 가져와 위기의 IT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 각 부처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IT 산업의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IT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도, 경쟁력 제고도 새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KICRA**